

# ‘수도권발 확진’ 함평 일가족, 의사 권고에도 뒤늦게 검사

### 증상 발현 뒤 병원 4차례 방문...동선·접촉자 늘어 친척 확진 소식 듣고서야 옛새 만에 진단 검사 받아 학교·어린이집 등 11곳 방문...844명 검체 채취

전남 함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 중 어머니가 증상 발현 직후 병원을 찾았으나, 의사의 권유를 무시하고 뒤늦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군은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함평읍에 거주하는 40대 어머니 A씨와 초등학생 딸, 5세 아들 등 일가족 3명은 전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전남 186~188번 환자로 분류돼 강진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족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광주의 친척집을 방문, 평택 140번 확진자와 20분 가량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머니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발열·기침 등이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14분께부터 10여분간 읍내 한 의원을 방문했다. 다음날인 28일에도 의원에서 감기 진료를 받았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지난달 29일과 30일 지역 병원을 2차례 찾았다. 진료 과정에서 A씨의 발열 증상으로 미뤄 의사가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유

했으니, A씨는 이를 듣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평소 자주 감기에 걸렸던 만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방역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늦어지는 사이 A씨의 자녀들도 지난달 30일 밤부터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이들 가족이 다녀간 지역 내 주요 동선도 11곳까지 늘어났다.

현재까지 파악된 동선은 A씨 근무 직장, 지역 병·의원 2곳, 약국 2곳, 생활용품 판매점, 음식점, 학원 등이다.

이 가족은 전날 오전 친지인 평택 140번 환자가 최종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다.

방역당국은 검체 채취 직후 선제적 방역조치로써 자택·직장·학교·어린이집 등 이동 동선을 미리 소독했다. 가족의 확진 판정에 따라 접촉자 파악 및 진단 검사도 곧바로 진행했다.

딸이 재학 중인 함평초등학교 교직원·학생 507명, 아들이 다니는 삼애어린이집 원생·교사 90명, 지역사회 내 동선 접촉자 247명 등 총 844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42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2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지난달 29일 이후 사흘 만에 또다시 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우려스럽다”면서 “2·3차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긴급 발표문을 내고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이후 도내에서 지역감염 확진자가 7명 발생했다. 최근 지역감염은 수도권 등지 방문 등을



1일 전남 함평군 함평읍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함평에서는 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일가족 3명이 전남 확진 판정을 받았다.

통한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 지역 방문 또는 교류를 자제해달라. 감기 증상이더라도 아

프면 외부 활동을 하지 말고, 즉시 보건소·의료기관의 상담을 거쳐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순천경찰서 스크론편 내 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 최근 등교 시간을 활용하여, 관내 동명초등학교에서 순천경찰서, 모범안전자회, 녹색어머니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날 캠페인에서는 최근 스크론편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ALL-Read 신호등에 대해 알리고, ‘서다.보다.걷다’ 등 교통안전 수칙에 대한 홍보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물품인 물병 등을 배부하였다.

## 옛 직장동료 찾아가 흥기 습격 50대 2심도 집유

### “원심 양형 합리적 범위, 검사 항소 기각”

술에 취해 옛 직장 동료에게 흥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사회봉사, 각 40시간의 알코올·도박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은 A(52)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변론·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5시께 광주 북구 모 편의점 앞에서 옛 직장 동료 B(56)씨의 신체 일부를 흥기로 2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편의점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최이슬 기자

###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반대한 시민단체 왜?”

## ‘명분없는 시정 발목잡기 논란’

### 서울·광주 대도시와 전남 시 단위 지자체 시행 중 시민단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주거환경 개선 ‘발목’

순천시가 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2중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폐지를 놓고 순천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정 발목잡기란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2중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용적률을 현행 250%와 18층 이하로 층수 제한된 조례를 용적률 220% 이하로 낮추고,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일부 순천시민단체가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 시민단체가 전국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시행으로 검증된 좋은 제도 개선에 역행하는 등 현실에 동떨어진 내용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로는 현재

시민단체가 인구증가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시는 일률적인 동일한 층수(아파트)로 건축한 것은 외부 미관과 자연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 조망이 좋은 곳 등의 위치에 18층 이상의 층수로 건설하고 필요에 따라 뒷산의 조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에는 저층으로 건설해서 자연경관을 살려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기 등의 위함이다.

시가 이번엔 추진 중인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11년 7월 2중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했다. 서울시도 2012년 5월부터 적용하고 있고, 광주 등 전국 대도시에서도 이 법률을 따르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여수·광양·나주시 등 순천을 제외한 4개 시 단위 지자체가 250%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층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들 지자체는 열린 스카이라인을 유도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한편 순천시와 시민단체는 서로 입장차 커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를 놓고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동부채무본부김승호 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